

주간 통일정세

2015-44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적대행위 중지하라” 한미연합훈련 비난(11/3,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3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남한 호전세력은 남북 화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상대로 한 핵전쟁 연습소동들을 벌이면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려고 미친듯이 발광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적대행위의 사례로 지난달 19~30일 열린 호국훈련과 최근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전투기 등이 동원된 가운데 동해상에서 개최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남북 사이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무엇보다도 남한 당국이 동족을 반대해 외세와 함께 감행하는 온갖 군사적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남한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의 ‘북지역 진입’ 문제를 놓고 쑥덕공론을 벌여놓고 미국의 각본에 따라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3각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한 당국은 대결전쟁소동으로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민족의 버림을 받고 싶지도 불속에 뛰어드는 머저리짓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2명 개성공단 출입 불허(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남측) 관리위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출입을 제한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왔다”고 전함.
 - 이에 뉴스는 남측이 즉각 항의하고 출입제한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서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도함.

- 개성공단 입주기업 올해부터 북한에 ‘세금’ 낸다(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을 보도함.

- 北,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 출입제한 철회(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북한이 지난 3일 최상철 부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던 것을 철회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5일) 오후 관리위 부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또한 대변인은 “이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며 “(북측은) ‘관리위 부위원장의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출입 신청 시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외통위, 2년여만에 방북...개성 만월대 시찰(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외통위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 58명이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지난 2013년 10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이후 2년여 만에 성사된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현장 방문 및 발굴 작업의 진척도 점검,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으로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함.

-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과 ‘북 인권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북남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며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저해를 주는 적대행위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1.2, 중앙방송)
- “조선민족끼리 이념은 자주통일을 위한 절대불변의 원칙”이라며 ‘우리민족 끼리 이념을 외면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면 남북관계는 우여곡절과 파국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민족끼리 이념 구현’ 강조(11.3,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 부산 입항 관련 ‘군사적으로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침전쟁연습을 벌이기 위해서’라며 ‘南 군부호전광들이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는 길로 계속 출달음친다면 저들의 자멸만을 앞당길 뿐’이라고 위협(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現 남북관계는 ‘한걸음씩 개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힘과 지혜를 합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우리민족끼리 자세 견지 및 대결적 행동 중단’ 강조(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붕괴될 것, 통일이 얼마 안남았다’ 등 발언(11.2, ‘통일대비 북한지역 SOC사업과 실향민의 역할’ 세미나)에 대해 “우리를 헐뜯는 망발을 늘어놓아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다”고 조소(11.6, 중앙통신·민주조선)
- ‘韓美연합군사령부는 동북아시아지역을 타고 앉으려는 미국과 상전을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매국노들의 공모결탁의 산물’이었다며 ‘미국과의 굴종적인 동맹을 끝장내는 정책적 결단’ 촉구(11.7,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 연일 ‘일본군위안부’ 비판…“침략역사 미화엔 범죄목적”(1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2일 ‘과거 죄악을 왜 부인하는가’란 사설에서 “일본은 지난날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것을 비롯해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에 대해 오늘날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그것을 덮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고 비난함.
 - 사설은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주변 나라들이 외교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면서 “일본의 철면피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과렴치한 망언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라며 분노를 표시하였고, “일본 반동들이 일제의 침략 역사를 미화 분식하는 밀바탕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자는 범죄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지적함.
 - 조선중앙통신도 2일 “최근 일본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위안부’ 문제해결모임이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빨리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비판과 미국 뉴저지주의 위안부 추모비 건립 5주년 기념식 소식을 전하며 이는 “과거 일제의 침략 역사와 반인륜 범죄를 한사코 미화 분식하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美·日에 ‘눈에는 눈’ 전략(11/5, 민주조선; 11/6,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5일 ‘미국은 인권에 대해 떠들 자격이 없다’란 글에서 미국의 실업과 노숙, 범죄 실태를 거론하며 “인권을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미국이 제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목청을 돋우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6일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미국에는 미래가 없다’란 글에서 “1%의 특권 계층이 99%의 근로 인민 대중을 착취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라며 “미국이야말로 인민 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해줄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함.

- 이어 “유색 인종과 소수 민족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인종 주의국가”라며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썩어빠진 사회제도 그 자체를 들어내지 않는 이상 극심한 인권 위기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밝힘.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외무성 공보국장 “북미 평화협정은 美정부 의지에 달려”(11/4, 연합뉴스, APTN)
 - 연합뉴스는 4일 정동학 북한 외무성 공보국장이 AP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수십년에 걸친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만 평화협정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정동학 공보국장은 “한반도 핵 문제는 수십년에 걸친 미 정부의 대(對)북 적대적 정책과 끝없는 핵 위협과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미 정부는 끊임없이 남한에 전략적 핵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핵 항공모함이 항상 북한을 향하고 있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들이 항상 남한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이 미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음을 강조했다고 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 “위안부 피해자 복에도 있다…전체적 해결해야”(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군

-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만여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 했다면서 “일본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여성의 존엄과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 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또한 일본이 이 외에도 조선인 840만 여 명 강제 연행, 100여 만 명 학살, 창씨개명, 생체 실험과 같은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70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핏대를 세웠고, “전체 조선 민족이 당한 피해를 전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중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일본 고래잡이’에 “범죄행위” 성토(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고래사냥군의 감출 수 없는 흑심’이라는 글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외면하고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본의 무지막지한 고래사냥행위는 지구상의 귀중한 고래자원을 고갈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일본의 처사는 국제사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면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가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금지했지만 일본은 1987년부터 ‘과학연구용’이란 간판을 내걸고 수많은 고래를 계속 잡아들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본의 ‘연구용’ 고래잡이란 상업용 고래잡이를 가리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총회,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 강력 촉구(11/2,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가 2일 ‘핵무기 완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핵무기 없는 평화적이고 안전한 세계를 실현하고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와 관련하여

-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가조치를 촉구한 이 결의안에 대해 156개국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3개국과 17개국에 그쳤다고 설명함.
- 방송은 이 결의안이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및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핵 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임.
 - 결의안은 또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추가 핵실험 자제 및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정영원 「청맹」 부위원장), 11월 2일 '세계민주청년연맹 제19차 대회'(쿠바) 참가와 베네수엘라 방문차 평양 출발(11.2, 중앙통신)
- 프랑스 실업계 대표단(단장 : 알방 응 프랑스 '빅토르 섹갈렌기금' 중국대표), 11월 2일 평양 도착(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란 노동자의 집 대표단(단장: 알리레자 마흐준 총서기), 11월 2일 귀국(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새 세대일꾼 대표단(단장: 정희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총 부위원장), 11월 3일 평양도착(11.3, 중앙통신)
- 싱가포르 여성조직이사회 대표단·「총련」 조선신보사 대표단, 11월 3일 각각 평양 출발(11.3, 중앙통신·중앙방송)
- 더 인터셉터(美 폭로전문 웹사이트)가 폭로한 '인도주의 국제봉사그룹을 이용한 정탐계획' 관련 '미국의 극악한 반인도주의적, 반인권주의적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인도주의협조단체를 통한 간첩활동 중단' 촉구(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등 관련 미국의 '北 도발·위협' 발언들에 대해 '조선의 군사적 위력, 조선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전쟁을 강요한다면 공화국은 기꺼이 응해줄 것'이라고 위협(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11월 5일 신임 주북 인도 대사(자스민다르 카스투리아)와 담화(11.5, 중앙통신)

- 日 극우익 정객들의 ‘가을철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아시아나라 인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난 및 ‘군국주의 부활·재침착동 중단 및 과거청산’ 촉구(1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미 사이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항구적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선결조건’이라며 ‘평화협정체결을 뒷전에 밀어놓을수록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 및 ‘평화협정체결 제안의 긍정적 호응’ 촉구(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과 조선특산물판매(주) 사장에 대한 ‘외환법위반’혐의 재판 관련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총련의 권위와 위신을 떨어뜨리고 전면 탄압의 구실을 찾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라며 ‘日 당국이 조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부당한 형벌 취소와 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 11월 7일 앙골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여 독립 40주년 경축행사를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11.7,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정치사상 교육 앞세워야”…‘군사일꾼대회’서 주문(11/3-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지난 3~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학생들을 군사가로 키우기 전에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정치사상 교육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며 “군사학교에서 군사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 올리고 부대지휘관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강의실과 훈련장, 과목연구실,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정보화·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면서 “교육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학교관리 운영사업을 정규화·규범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교원의 헌신적 노력은 용사의 붉은 피처럼 고결하고 천길 바닷속 진주보석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군사학교 교원들을 금방석에 앉혀 누구나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은 심정” 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한 북한의 각급 군사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에 김 제1위원장과 함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이 주석단에 앉았으며, 보고를 맡은 황 총정치국장은 “주체적 군사교육사상과 교육 전통은 사상도 품모도 대원수님 그대로인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함.
- 북 김정은 ‘고사로켓’ 사격훈련 참관…“현대화 다그쳐야”(1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서부전선 반(反)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 부문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 고사로켓 개발 사업을 적극화해나감으로써 적들의 어떤 공중 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통같이 보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고사로켓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의 현대화·정밀화를 계속 다그쳐야한다”고 주문했음을 밝힘.

- 또한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사격장 감시소에서 부대의 실태와 사격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격 훈련을 직접 참관했으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금철 부총참모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꾼대회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 “이번 대회가 군사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기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념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 참가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빨치산 출신 북한 리을설 원수, 폐암으로 사망(11/8, 조선중앙통신)

- 빨치산 출신인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가 7일 폐암 투병 중 94세로 사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북한은 리을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리을설 동지는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영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해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강조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콜리맛보다 들쭉맛…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당 창건 70주년의 성과를 자축하면서 이날 2면 전체를 할애한 편집국논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에서 “혁명신념이야말로 주체혁명의 고귀한 재보”라며 “우리 인민이 간직한 혁명신념의 근본핵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 논설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당 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경축한 승리의 영마루(꼭대기)에 있다”며 “혁명의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절감하고 있다”고 자찬하였고, “코카콜라맛이 아니라 백두산 들쭉맛을 좋아하며 범속한 유행가가 아니라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새 세대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찬사를 보냄.
 - 그러면서 신문은 “비록 아직은 (인민이) 어렵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서도 “제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인민의 생활은 더없이 당당하고 활기에 넘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엎어놓고 뒤집어 놓아도 당과 수령만을 따르고,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도 마음을 더욱 순결하게 가다듬고 혁명가의 본태를 지키는 것이 조선의 참된 혁명가”라며 거듭 충성을 강조함.
- 북한, 7차 당대회 ‘띠우기’…“당에 황금산 선물하자”(11/2,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조선의오늘)
 - 조선중앙방송은 2일 평안남도 남포시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일꾼들은 당대회를 당 역사에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빛내어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꾼들이 “대회를 위해 당사업 화력을 총집중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원산군민발전소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정한 기일까지 완성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2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0여개 공정의 현대화·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완성하여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일념으로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고

- 있다”고 전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항일혁명 투사, 공화국영웅, 노력영웅,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의 각종 발언도 소개함.
- ‘조선의오늘’도 2일 내각사무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대회는 당건설과 혁명 발전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사”라고 규정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2일 95회 생일을 맞은 김철만(항일혁명투사)에게 ‘생일상’ 전달(11.2, 중앙통신)
- 노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보고회, 11월 2일 김기남(당 비서)·리영식(노동신문사 책임주필/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2, 중앙통신)
-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 주체의 영도방식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라며 ‘혁명사상과 영도방식의 위대성’ 강조(11.4,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문화성,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 활발히 전개(11.7,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올해 10만 정보에 나무 수억그루 심었다”(11/2, 내나라)
 - ‘내나라’는 북한 산림총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올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1정보 = 9천917㎡)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밝힘.
 - 백원철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은 ‘내나라’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창성이갈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수십 종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10여만 정보의 산과 들에 심는 성과가 이룩됐다”고 말하면서 “중앙양묘장만 놓고 보아도 수십 여종에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해 산림복구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그는 “나무를 심는 데만 그치지 않고 물과 비료주기, 풀과 잡목 베어주기를 비롯해 나무 비배(거름을 주고 가꿈)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키우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을 바치는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은 조국의 모든 산들을 머지않아 푸른 숲 설레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 “김정은시대 창조물”(11/3, 조선중앙TV, 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은 북한이 3일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 매체는 ‘평양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중구역에 조성된 미래과학자거리에 수천 가구의 주택과 150여 개의 상업 시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기상수문국, 우리의 백화점격인 창광상점, 탁아소, 유치원, 학교, 체육공원 등이 들어섰다고 소개했으며,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태복·오수용 노동당 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매체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준공사에서 “미래과학자거리는 위대한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과 사회주의 조선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는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으며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해야 하겠다”고 독려했다고 덧붙임.
- 재생에너지 사용 독려하는 북한…“전력난 타개책”(1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에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했다며 “녹색 건축물 창조의 비약적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3일 보도함.
 - 또한 “녹색 건축 창조의 목적은 자원과 에너지(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오염 발생을 감소시키며 생태 환경을 보호해 사람들에게 이로운 조건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독려했.
- 북, 청천강에 수력발전소 10개 건설(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평안북도 구장, 개천 지방을 다녀온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평안남도 원리 앞에서 시작해 향산군까지 이르는 청천강 상류에

10개의 계단식 수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물을 잡아 농사도 하고 전기도 생산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 때에는 수력발전소를 몇 개 건설하지 못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단번에 여러 개 건설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건설비 충당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고 덧붙임.
- 이어 소식통은 “그러나 언제(댐)를 다 쌓는다 해도 발전기가 없어 전기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부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접경지역 관광개발 속도…“중국인 관광객 겨냥”(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북한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5일 ‘하늘에서 본 북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월 북한 상공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중국 투먼시의 (50억 위안, 한화 약 8천900억원) 투자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라며 “(2013년 12월) 투자협정에 합의한 뒤 1년간 움직임이 없다 최근 새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힘.
- 또한 방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온성섬 관광개발구 남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건설됐고, 기존도로는 새 단장을 하는 기초공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둘레 2.5km, 면적은 930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골프코스과 수영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함.

■ 북한 김정은이 한 사료작물을 ‘애국풀’로 불렀더니…(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1116호 농장을 찾아가 접한 사료용 작물을 ‘애국풀’로 명명한 것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애국풀’을 널리 퍼트리기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작업은) 평양시가 앞장서고 있으며, 조직배양에 의한 종묘 생산방법에서 번식의 근본을 찾고 있다”고 소개함.
- 평양시는 내년 5월 열리는 7차 노동당대회 소집 이전에 10만개 이상의 종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평안남도도 현재 시, 군 축산 부문 관계자들에게 ‘애국풀’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 관련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이밖에 강원도와 자강도에서도 당대회

전에 한 개의 종묘라도 더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힘.

다. 경제 상황

- 北 ‘태양빛 에너지 버스’ 운행…“승객 140명에 시속 40km”(11/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남포시 과학기술위원회 부원 정인성의 말을 인용해 “최근 남포시에서 태양빛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버스를 만들어 여객 운수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재 800킬로의 거리를 달려 보았는데 손님들을 70명, 최고 140명까지 태우고도 40킬로미터메씨(시속 40km)의 속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었다”며 버스의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함.
- “백두산청년발전소, 김정은 불같은 독촉에 대충대충 건설”(11/2,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당 창건 70돌을 맞아 대대적으로 선전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김정은의 치적 선전을 위해 공기(工期)를 훨씬 앞당겨 무리하게 부실공사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또한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발전소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완공하라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른 당 중앙의 불같은 독촉에 어쩔 수없이 대충대충 완공됐다”며 “특히 과거 건설된 수력발전소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멘트와 모래, 자갈 혼합비율이 제대로 맞지 않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고 전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10년이 걸려야 할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도 김정일의 지시로 3년 만에 완공됐지만 부실공사로 진행돼 제대로 된 발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도 부실 공사의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함.
- 북, 발전소 건설자에 ‘평양견학’ 선물(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 당국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건설일꾼들에게 올해 12월까지 교대로 평양견학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로 조직된 첫 평양견학단이 11월 2일 일정을 마치고 열차편으로 건설현장에 돌아왔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한번에 3천 명씩 조직되는 평양견학을 마치고 나서 건설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기념메달’을 수여받았으며, 여성들은 ‘은하수’ 화장품과 속옷 한 벌, 남성들은 평양소주 한 병과 평양담배 한 보루, 속옷 한 벌이 들어있는 여행용 트렁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함.
- 북, 추수기에도 쌀값 안 떨어져(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대북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 지방을 휩쓴 지독한 가뭄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평안북도 지방의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함.
 - 신의주와 연계를 갖고 있는 중국 료녕성의 한 대북 소식통은 “작년보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신의주 남민동과 남하동, 친선장마당에서 쌀 1kg은 4천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쌀값 상승에 민감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주민들이 달러나 위안화를 가지고 있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한 사람이 1년을 먹자면 미화 200달러는 되어야 하는데, 요즘 웬만한 도시 사람들은 그만큼 돈은 굴리고 있다”고 덧붙임.
- WFP “5세 미만 북한 아동 3분의 1 영양실조”(11/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 다미안 킨 아시아지역 대변인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며,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3일 보도함.
 - 킨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북한의 극심했던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해 취약계층의 영양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고, “올해 말 종료되는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며 “WFP가 현재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6월 이후에는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함.
- “김장채소 軍·수해지역 우선 공급방침에 배추·무 가격 폭등”(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일 함경북도 소식통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전국적인 가뭄과 잇따른 장마피해로 대부분 협동농장 남새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다”면서 “기관 기업소들은 정해진 인근 협동농장에 나가 배추·가을(수확)을

진행하지만 지난해 보다 예상 할당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하였음을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청진 수남 시장에서 배추 1kg이 1,000원이나 올라 3,000원에, 무는 500원 가량 올라 2,000원인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지난 8월, 함경도와 양강도 일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많은 ‘남새밭’이 유실됐기 때문에 올해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고 설명함.
- 소식통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데도 위(중앙)에서는 피해(나선)지역 우선공급 방침을 내세우며 일부지역 농장 배추 한포기도 타 지역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했으며, “주변 부대에 공급할 계획분을 최우선 보장해야 하는데다, 수해지역 공급까지 맡게 된 농장원들도 김장걱정부터 하고 있다”고 전해짐.

■ 北 평양시 표기 확대...자체 OS ‘붉은별3.0’에도 적용(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전 구글 직원인 월 스코트가 비즈니스 및 IT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인사이드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북한이 자체 개발한 데스크톱 운영체제(OS) ‘붉은별 3.0’에 평양시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뉴스는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스코트가 ‘붉은별 3.0’을 구입해 귀국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북한의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해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북한이 ‘붉은별 3.0’ 설치 중간과정에 시간대 설정의 옵션으로 ‘조선-평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다고 전함.

■ 북한매체 “화장품 품질 개선 성과”...리설주의 함?(11/5,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5일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이란 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소식을 전하며 “이번 전시회에 80여 종에 수백 점이나 되는 화장품들을 출품한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전시대들은 마치도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방불케 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매체는 화장비누, 살결물(스킨), 샴푸, 린스 등 진열 상품을 예로 들며 “상표들이 매우 특색있고 포장 또한 달라졌다. 대변에(단숨에) 눈길을 끄는 새 상품들도 많았다”고 소개하였고, “특히 자연건조로 만든 기능성 화장비누는 사람들의 피부에 좋고 여성들의 미감에 맞는 색과 향을 갖고 있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았다”고 전시회장의 분위기를 전함.

- 또한 매체는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란 구호를 내세우며 “우리 화장품 공업의 목표와 전진 속도가 또 달라졌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많은 상품들에 그 꿈이 실렸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평양화장품 공장뿐 아니라 신의주화장품공장도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체의 기술역량을 더욱 튼튼히 꾸림으로써 기술갱신 주기를 부단히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EU 작년 무역 76% 감소…“북 광물수출 중단 탓”(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14년 북한과 EU의 무역액이 3천 500만 유로(436억여 원)로 2013년 1억 4천 600만유로(1천 819억여 원)보다 76% 줄었다고 EU 집행위원회의 ‘대북한 교역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4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지난해 무역액이 북한의 광물 수출 중단 탓에 2013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보도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對) EU 무역은 수출 1천 800만 유로(224억여 원), 수입 1천 700만 유로(212억여 원)로 각각 집계되었고, 주요 수출 품목은 가공품 900만 유로(112억여 원), 화공품 400만 유로(49억여 원), 중장비와 차량 부품류 200만 유로(24억여 원), 공산품 100만유로(12억여 원) 등이며 주 수입 품목은 중장비와 차량부품 500만 유로(62억여 원), 식품과 동물 400만 유로(49억여 원), 화공품 300만 유로(37억여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북중 ‘휴대전화 방해전파’ 갈등…“중, 북에 중단 요구”(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방해 전파로 국경 인근 중국 주민들이 통화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당국이 방해 전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 당국이 국경지대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외부와의 연락 차단을 위해 방해 전파를 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창바이현 정부가 방해 전파 중단을 요구했으나 양강도 당국이 전파 발사 중단 대가로 창바이현 정부에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함.
 - 이에 중국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린성과 랴오닝(遼寧)성 정부는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 영사관까지 찾아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함.

- “외화난 北, 보수중인 북중교량 도보로 中관광객 訪北 허용”(11/3, 데일리NK)
 - 데일리NK는 3일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9월 28일 파손된 중국 단둥(丹東) - 북한 신의주 간 조중(북중)우의교 보수 공사가 최근까지 진행되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 여행객들로 하여금 도보로 조중우의교를 건너 방북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북한 당국은 신의주를 방문하는 일일 여행객들에게 걸어서 들어오라는 통보를 내렸다”면서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제 버스가 아닌 도보로 방북하는 여행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소개함.

- 1-9월 미북 교역 450만 달러...대부분 지원품(11/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미국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백 50만 달러 (\$4,488,000)로 집계됨에 따라 전년도인 2014년 같은 기간 (\$21,900,000)의 20%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이 같은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 중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이며 그 중에서도 9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그러면서 방송은 총 450만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백 83만 달러 (\$3,837,000)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 (NAICS 990000)’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전자제품이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다고 설명함.

- 헬기로 평양 둘러보는 관광상품 나왔다...평양마리톤 상품도(11/5, 연합뉴스)
 - 중국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는 5일 헬기 투어가 포함된 새해맞이 평양 관광 상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박6일짜리인 이 상품은 올해의 마지막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것이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관광객들은 새해 첫날 오전 북측이 제공하는 러시아제

밀 Mi-17을 타고 하늘을 날아 상공에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는 일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원래 상품가격 895유로(약 110만원)에 295유로를 추가로 내면 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또한 북한 여행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국 여행사들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북한의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관광상품도 잇달아 내놨는데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는 “북한을 방문해 평양마라톤에 참가하라”는 글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출시 소식을 알렸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여행객들은 대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김일성경기장 특별관람석에서 대회를 지켜볼 수 있다”면서 “모든 여행객에게는 북한 주민 7만 명이 참가하는 개막식과 폐회식 관람 기회도 주어진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가격은 5박6일 일정(내년 4월 8일~14일)의 상품이 995유로(약 123만 원),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관련 투어를 포함해 이들이 추가된 상품은 1천295유로라고 뉴스는 덧붙임.

■ “북 중 연결 신두만강대교 내년 10월 완공”(11/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중국 훈춘(琿春)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내년 10월 완공된다고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훈춘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교 건설에 필요한 총 투자액 1억 4천700만 위안(한화 262억여 원) 가운데 7천만 위안(125억여 원)이 투입됐다”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고, 549m 길이 새 다리는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현재 주교량 기초 공사가 끝나고 주교량 받침대 8개가 설치된 상황이라고 전해짐.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 10kw 풍력발전기 생산 공정 확립(11.2, 중앙통신)
- 「당 창건」 70주년 기념 평양시 경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 전시회·발표회(11.3 -7) 개막식, 11월 3일 평양 국제문화회관 에서 진행 및 박철근(조선과학기술 총연맹 평양시위원장/개막 발언) 등 참가(11.3, 중앙방송)
- 산림 및 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11월 3일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 및 국토환경보호성·국가과학원·김일성종합대학 등 연구사·기술자·교원 등 참가 (11.3,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 단나무(본명: 아로니 아)의 ‘유효성분 (열매정액 100mℓ 속에 헤스페리딘 3,210mg·루틴mg 함유 새롭게 확증 등) 추가’ 발견(11.3, 중앙통신)
- 전국 건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3~4 평양에서 진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9차 전국 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 11월 4일 김영훈(체육상, 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4, 중앙통신)
- 제13차 전국 조선옷전시회 개막식(11.4~6), 11월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 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월 2~6일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진행 및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체신부문 일꾼·과학자·기술자·교원 등 참가(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개성건재생산협동조합의 각종 수지폐기물로 연료 생산기술 개발 등 ‘각지 공장-기업소의 재자원화기술 연구 도입으로 연료문제 해결·도시환경 개선’ 보도(11.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북, 자본주의 생산방식 묵인(11/2,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이 “가내 수공업적이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며 “장마당이나 마찬가지로 소규모 기업들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개인이 자동차나 다른 운전기재(운송수단)들을 공장, 기업소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던 시대는 한물갔다”며 이제는 “소규모 기업들이 버젓이 작업장과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많이 생기자 중국 장사꾼들이 들여오는 장사물품도 달라지고 있다”며 “완제품도 들어오지만 개인영업장에 필요한 부속품의 수입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함흥에서 개인들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자전거, 오토바이

다야(타이어)는 중국산보다 값이 훨씬 비싸고 자동차도 돈만 내면 개인 수리소에서 수리해 준다고 덧붙임.

- 북한 태블릿PC 룡흥 뜯어보니…“남한산 메모리 들어있네”(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2년 전 출시한 태블릿PC 룡흥에 사용된 반도체가 국내산이며, 이를 분해한 결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2개가 장착돼 있었다고 보도함.
 - 뉴스는 NK지식인연대가 “ 룡흥의 포장상자에 ‘판형컴퓨터(태블릿PC) 룡흥 - 룡약산 정보기술교류소’라고 쓰여있고, 제원은 CPU 1GHz, 주기억(램) 512MB, 내부기억기(내장메모리) 8GB, 외부기억기(외장메모리) 16GB, 화면크기 8인치, 무게 250g, 배터리 사용시간은 6시간”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임.

- 북한 군부, 주유소 독점 운영(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이 “평양과 원산,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옆에 원유판매소들이 많이 생겨났다”면서 “고속도로는 물론 평양-신의주간 일반 국도 옆에도 원유판매소들이 줄줄이 들어섰다”고 전했다.
 -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2000년대처럼 도람(드럼통)으로 휘발유를 팔던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면서 “과거에도 군대들이 기름을 빼내 장사꾼에게 넘겨주고 돈을 벌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네가 직접 주유소를 차리고 팔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로써 당국의 비호 하에 군대가 주유소 사업권을 틀어쥐고 안정적인 수입을 챙긴다고 덧붙임.
 - 이어 방송은 군부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는 부흥 원유판매소, 삼흥 원유판매소, 강성 원유판매소 등으로, 판매소 앞에 붙은 이름은 인민군 소속 외화벌이 회사이름과 같다고 설명하면서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은 목이 좋은 장소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미 거주자' 집중 단속(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작년 3월에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5대 사법기관(당,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재판소) 합동의 '312 상무'를 통해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등록 미 등록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전함.
 - 평양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 돈벌이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 판단하여 '312 상무'를 총동원해 미 등록자를 색출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함.
 - 방송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본 거주지를 이탈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 거주자' 신분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고 설명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일 잘하는 젊은 여성들은 외화벌이 노동자로 뽑혀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 임가공 공장들은 이들 '미 거주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312 상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반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 북, 독일산 첨단장비로 핸드폰 전파 감지(1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보도를 통해 국경연선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북한 주민들이 올해 8월부터 일절 전화연락을 끊는 원인은 군사용으로 제작된 독일산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라고 밝힘.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올해 3월 경 국경연선에 러시아산 휴대전화 추적 장비를 배치한데 이어 7월부터는 독일산 첨단 휴대전화 감지 장비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전하면서, 휴대전화 감지 장비는 추적용과 방해전파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경연선에 약 3천대정도, 민경(휴전선)부대들에 6천대정도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 합치면 1만여 대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방송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올해 8월 20일 북한이 중국 전화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를 통해 남한과 통화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에서 비공개

처형한 가정주부여성 3인 역시 독일산 전파감지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기존 중국, 러시아 장비들은 휴대전화 발신위치만 식별했을 뿐 기지국까지 구별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독일산 장비는 휴대전화 발신장소와 기지국까지 정확히 구분해낸다”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 나선시 홍수 복구과정 소개…‘전화위복의 30여일’ 방송(11/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전화위복의 30여일’이라는 제목의 15분짜리 특집 영상을 방송하며 지난 8월 발생한 나선시의 홍수 피해 복구 과정을 상세히 소개함.
 - 초반에 피해 상황을 등장시킨 이 영상은 이어 “그 시각 나선시 인민은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가 토의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어떤 ‘사랑의 명령’이 내려지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피해 복구 명령이 하달된 지난 8월 회의 모습을 전하고 “인민 생활은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라 강조함.
 - 또한 영상에는 군인과 주민이 햇볕 아래에서 주택을 짓거나 거리 퇴적물을 쓸어내는 모습, 제방을 쌓는 모습, 자재나 식료품을 확보하려 애쓰는 나선가구공장과 나선종합식료공장, 선봉피복공장 등이 등장했으며 특히 물살에 맞서 최고지도자의 초상화나 벽화를 보전하려다 목숨을 잃은 주민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함.

- 북한, 체육도서 발간 활발…“체제결속 다지기 수단”(11/2,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2일 북한의 체육신문사를 소개하며 “원수님이 지피주신 체육 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해 일꾼들이 체육 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새 도서 집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사는 최근 북한의 체육 강국 정책 성과를 집약한 ‘절세 위인과 체육 열풍’을 비롯해 노동당의 체육 정책을 해설한 도서, 역경을 이겨낸 체육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집 ‘꿈과 희망’을 잇달아 펴냈으며 일반 대중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포츠 안마법을 소개한 책과 각종 스포츠 경기 규칙을 담은 ‘체육 경기 심판 지식’, 월드컵을 비롯한 축구 상식을 설명한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등도 발간함.

- “탈북자 둔 北기정, ‘南화장품·노트북’ 예물로 경제력 과시”(11/4, 데일리NK)
 - 데일리NK는 4일 양강도 소식통이 전화를 통해 “결혼을 앞둔 남성들은 신부에게서 손전지(휴대용 전등)나 열쇠고리를 비롯해, 남한산 노트북을 받는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혼 예물이 다양”하며, “최근 결혼 하는 남녀를 보면 신부에게는 한국산 화장품을, 신랑에게는 고급스러운 노트북을 선물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로 꼽힌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결혼을 앞둔 신부는 약혼식을 통해 한국산 화장품을 받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신랑은 신부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는데 손목시계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상류층에서 결혼선물로 주는 중국산 중고 노트북은 북한돈 150만 원, 독일산은 250만~300만 원 정도이고 한국산은 구하기가 힘들어 500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설명함.

- 평양공항에 장애인화장실…“북 변화 신호” vs “선전효과”(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 7월 준공한 평양국제공항 신청사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4일 보도함.
 - 방송은 최근 방북한 서방 관광객이 평양공항에서 찍은 사진에 “화려한 돌로 장식된 청사에 장애인을 나타내는 표시와 함께 ‘위생실’(화장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문 위에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열린 문 사이로 단체복을 입은 북한 직원 한 명이 청소를 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있고 다른 직원 세 명은 주변에 둘러서 있다”며 관광객에서 제공받은 사진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그러면서 방송은 이 관광객이 공항 신청사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몇 군데 더 설치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평양공항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인권개선 압박을 의식해 이뤄진 ‘선전용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임.

- 히딩크, 풋살경기장 건립 지원차 방북길 올라(1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69)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5일 오전 시각장애인을 위해 거스히딩크재단에서 추진한 풋살

축구장 ‘드림필드’ 건립을 위해 김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지난 2일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히딩크 전 감독이 방북 이유에 대해 “북한으로 드림필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축구와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을 덧붙이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축구 관계자 등과 만나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7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중매쟁이, 결혼대상 가족중 탈북자 있다고 밝히는 이유(1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5일 함경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남한에 있는 탈북자로부터 방조(傍助)를 받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속에서 이전에는 ‘적대계급’으로 분류됐던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은 지난 시기와 달리 굳이 정치적으로 우월한 가정에서 결혼 대상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남한에 있는 탈북자의 방조를 받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과 사돈을 맺으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다는 인식이 강해 오히려 조건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소식통은 “가족 중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있는 대상과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라고 해서 걸림돌로 생각하는 시기는 끝”이며 “이를 빠르게 눈치 챈 중매꾼들은 결혼대상의 가족 일부가 남한에 있다는 것을 먼저 귀띔해주기도 한다”고 전하였고, “간부들도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을 둔 가정에 이런저런 구실로 뇌물을 요구할 때도 있다”면서 “탈북자 가족을 둔 가정의 돈 주머니가 든든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부 인민보안원들이나 국가안전보위원들도 노골적으로 뇌물을 바칠 것을 요구해 제 이속을 챙기기도 한다”고 설명함.

- 제16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전시회 폐막식, 11월 2일 전극만(교육위원회 부위원장/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2, 중앙통신)
- 나선시, 체육관(2층 규모, 농구·배구·탁구 시설 등) 새로 건설(11.2, 중앙통신)
- 北 리세광 선수, ‘제46회 세계기체체조선수권대회’ 남자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 획득(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4차 전국 낚시질애호가들의 경기, 11월 4일 평양 대동강반에서 진행(11.4, 중앙통신)
-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이어달리기대열, 11월 1일 나선시 나진지구에 도착 및 나선시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및 제2차 전국 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의 상봉모임 진행(11.4, 중앙통신)

- 제34차 윤이상음악회, 11월 5일 박춘남(문화상)·홍경호(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등이 관람한 가운데 모란봉극장에서 진행(11.5, 중앙통신)
- 전국 보건일꾼 위생선전 대경연,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진행(11.5, 중앙통신)
-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 리세광 선수, 11월 5일 귀환(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내각, 11월 6일 옥류관에서 리세광 선수(제46차 세계기계체 조선수권대회 우승)를 위한 연회 개최 및 김용진(내각 부총리/연 설)·김영훈(체육상)·리종무(軍 장령) 등 참가(11.6, 중앙통신)
- 제46차 예술인체육대회(축구·농구·탁구·육상 등), 11월 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및 김기남(黨 비서)·박춘남(문화상)·안동춘(문예총 위원장) 등 경기 관람(1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북한-미국 올해 무역 80% 감소…美 대북 수입은 '제로'(11/5,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올해 무역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미국의 무역액이 448만8천 달러(51억여 원)로, 작년 같은 기간 2천190만 달러(248억여 원)보다 79.5% 줄었다.”고 보도했으며, 두 나라의 무역액은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이며, 수입액은 전혀 없음.
 -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정책으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역내 평화·안정 기여”(11/3, 연합뉴스)
 - 美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지난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3국의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우리는 3국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 美 육참총장, “남북한 결국 통일될 것…미국 평화통일 선호”(11/3, 연합뉴스)
 - 마크 밀리 美 육군참모총장은 2일 미국 국방전문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남북한이 결국 통일될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결국 미래 어느 시점에 남북한은 다시 하나의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밀리 총장은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해 “평화적일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평화적이고 외교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한다.”고 밝힘.

- 美 전문가들, “韓日 정상간 첫 만남 큰 의미…앞으로가 관건”(11/3, 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대해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함.
 - 특히 양국 사이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 그러나 양국이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양국이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주문이 나왔음.

- 美 국방부 대변인 “어떤 대통령 나와도 한미동맹 변화 없어”(11/5,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어떤 대통령이 나오고,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음.
 - 제프 데이비스 美 국방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말함.
 -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무려 65년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한·미동맹이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안보 공약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이라고 강조함.

- 러셀 美 동아태차관보, “2015년 동북아서 과거사 문제 큰 진전”(11/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5년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 엄청난 진전을 보인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평가함.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저녁 뉴욕 소재 아시아소사이어티 초청으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최근 열린 한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말함.
 - 특히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만나 합의를 도출하고, 화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한 것은 매우 뜻 깊다.”고 평가함.
 - 그러면서 러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똘똘 뭉쳐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봄.

- 미국, “대인지뢰 한반도에서만 사용” 재확인(11/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의 스탠리 브라운 청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지구촌 안전하게 걷기’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저장·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브라운 청장은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공약이며 앞으로 이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브라운 청장은 다만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모든 곳에서 오타와 협약의 핵심요소들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리커창 총리, “한중 해양경계회담 빨리 재개하자”...EEZ협상타결 ‘의욕’(11/2, 연합뉴스)
 -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양자회담에서 “중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정식으로 재개하자”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 리 총리는 양국의 고위급 왕래와 고위층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 전통 안보, 법집행,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지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우리 입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지는 중국의 주장이 맞서왔기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여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리 총리의 관련 발언은 중국이 향후 진행될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 中 정부, “한중, 새 아이디어·영역·성장점 발굴해나갈 것”(11/2,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지금의 공고하고 양호한 (한중간) 협력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하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며, 새로운 성장점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또한 현재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인문 등의 영역이 함께 발전하고 있고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 화 대변인은 리 총리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종합발전 전략 격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취업난 해소 전략인 ‘창조경제’와 ‘대중창업·만중혁신 (大衆創業, 萬衆創新)’, 제조업발전 전략인 ‘제조업혁신 3.0’과 ‘중국제조2025’, 제3차 시장개척 전략 등에 대한 연계 발전을 매우 상세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12월중 개최…中 “유사문제 모범되길”(11/7,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이 협의를 거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제1차 회담을 오는 12월에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 화 대변인은 중국이 한결같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양국의 담판을 통해 이웃과의 해양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우호적 협상으로 중첩되는 해양권익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지역 국가 간의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양국의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우리는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운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 경계선을 설정하고 주장해왔음.

다. 한·일 관계

- **아베 총리, “軍위안부 조기타결 목표로 교섭 가속화에 의견 일치”(11/2,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 그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 주장할 점은 말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음.
 - 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중국·일본 3국간의 회담에 관해 “참가국이나 지역에 획기적인 것”이라며 “일·중·한의 프로세스가 정상화했다. 정례화(방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음.

- **日정부, “위안부 법적 종결됐지만 한일관계 감안해 협상”(1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군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데 대해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본 정부에 군위안부 관련 배상 책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을 재확인했음.

-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그런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계속 가속화한다는 것”이라며 한일 정상간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 스가 장관의 발언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정부 예산을 활용한 배상 등을 놓고 양국 정부 간의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됨.
-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서 “남중국해 공동대응” 거론(11/2, 연합뉴스)
 - 고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열려 있고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도록 한국이나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 그는 “현상(現狀)은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 사항이다.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주변에 함선을 파견한) 미군의 행동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음.
 -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副)장관은 이런 내용을 일본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언급을 거부했음.
 -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시 다시 문제제기하지 말아야”(1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일 정상회담 후 일본 방송에 출연해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아베는 한일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권 교체에 따라 변한다는 주장인 이른바 ‘골대 이동론’에 대해 질문받자 “서로 합의하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을 질문받자 아베는 “일본도 한국도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 와중에 일본, 한국, 미국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공통의 기반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음.
 - 아베 총리, “군위안부 일치점 찾을 수 있다.” 언급 주목(11/2,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2일 귀국 후 BS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양국 국민이 (해결책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 와중에 협상을 진행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물론 아베 총리는 이날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였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가 빈 말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본의 입장과,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 요구 사이에서 한일 외교당국이 창의적인 타협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밝힌 것은 상호 입장 차이가 여전함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들렸음.
- 일본서 위안부피해자 인도적 지원안 주목...“6월 합의직전 갔다.”(11/3,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간의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서 배상금 지급에 응할 뜻이 없으며, 대신 아시아여성기금의 남은 자금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고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음.
 - 1995년 설립돼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국민의 성금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다수 피해자가 기금이 주는 돈을 거부했음.
 -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 6월 무렵까지 아시아 여성기금의 남은 자금 약 8천만 엔(약 7억5천107만원)을 증액해 한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올해 8월 기준 47명)의 복지 사업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섭의 내막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음.
 - 아베 총리, 박대통령에 국제회의 활용한 후속회담 제안(1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향후 열릴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또 2일 밤 일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1일 열린 중일 정상회담 때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다자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소개했음.
 - 또 니혼게이지신문은 내년 한·일·중 정상회담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상반기 중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이 일정대로 되면 박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게 됨.

- 일본 외무상, 한일 협의서 위안부 소녀상에 문제제기(11/3,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하루 전날 열린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으며,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설치된 소녀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곳곳에서 설치되고 있는 소녀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미국 내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이나 설명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서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 것 등에 비춰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과 관련해 소녀상 설치 중단 또는 철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이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3일 사설에서 일본에만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예로 들었으며, 만약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 교섭 과정에서 소녀상 등의 설치 중단이나 철거를 요구하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 ‘법적종결·인도지원’…日, 위안부협상 프레임 짜기 시도(1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총리는 2일 귀국직후 TV에 출연,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2일 한일정상회담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 대신 ‘타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음.
 - 또, 정상회담 다음 날인 3일 여러 일본 신문들은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시아 여성기금 후속사업 차원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전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입장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비쳐졌음.
 - 아베 총리가 주장한 ‘법적 종결론’은 군위안부 제도의 불법성을 외면한 것으로, 한국 정부 및 한국 사법부의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아베 총리의 의도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한국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일본의 주장대로 협상의 틀을 짜려는 속내로 읽히고 있음.

- 아베 총리, “위안부 한일 기본입장 달라”…연내타결 ‘신중론’(11/5,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과 관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연내’라는 말도 있으나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밝힌 뒤 “연내로 잘라 버리면(기한을 설정하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고 다니가키 간사장이 전했다.

- 이후 다니가키 간사장은 간사장실을 통해 “연내로 잘라 버리면 어려워진다.”는 아베 총리 발언을 “기한을 끊으면 힘들게 될 수 있다. 연내를 향해 노력은 할 것”으로 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아베 총리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굳이 다니가키 간사장이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새롭게 소개한 것은 일본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 시점으로 제안한 ‘연내’를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됨.
- 靑, “日, 성의있는 자세로 위안부 협의 임해야”(11/5, 연합뉴스)
 - 청와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후속 협의 절차와 관련, “일본 정부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됐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연국 대변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과 관저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론에 대해 “연내로 잘라 버리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 정 대변인은 “양국 간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 등이 있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것에 기초해 (위안부 문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 이달 중 개최 조율(1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달 내에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음.
 - 이달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교섭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에 따른 것임.
 - 국장급 협의에는 이상덕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신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함.
 - 아베 총리 측근, “공은 한국에…위안부 해결책 한국이 제안하길”(1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은 “이제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며 한국이 군위안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하기우다는 이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재정 지출에 대해 “그것이 (해결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책은 이제부터다.”라고 밝힌 뒤 “어떤 방안이면 성의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이 있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 일본 정부, 한중일 정상회담 내년 5월 개최 검토(11/6, 연합뉴스)
 - 일본이 의장국을 맡을 한국·중국·일본 3국의 차기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 5월을 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이 4·5일 각각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사전 조율을 하면서 회담 정례화 방침이 확인되면 내년 5월쯤에 다음 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5월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에서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라는 별칭으로 개최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3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역사 인식 등으로 대립해 온 한국·중국·일본이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을 서방 국가에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박 대통령, 아베 총리 방한 때 장미 다발 보내(11/6, 연합뉴스)
 - 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달 1일 한국을 방문해 머문 객실에 박 대통령 명의의 붉은 장미꽃 다발이 배달됐다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이 밝혔음.
 -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해 마음을 쓴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으며, 아베 총리가 서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영접한 것도 실무방문인 것을 고려하면 관례보다 격을 올린 것이라고 아사히는 평가했음.
 - 아베 총리, “한국의 TPP 참여 환영…원년멤버 만든 규칙 수용이 전제”(11/6,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려 한다면 환영하지만, 참가 시 후발주자가 될 한국이 ‘원년 멤버’인 12개국이 만든 규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선발주자’의 기득권을 강조했다.
 - 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TPP 참가에 관심을 보이는데 대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라며 “환영하고 싶다.”고 밝혔음.

- 아베 총리는 또 지난 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리더끼리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으며,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를 힘 있게 이끄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日외무상, “위안부 문제, 아시아여성기금 등 고려해 대응 논의”(11/8, 연합뉴스)
 - 기시다 외무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국 간 교섭을 가속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 경로를 총동원해 교섭을 진전하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이날 NHK에 말했다.
 - 그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이런 여러 대응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부터 무엇이 가능한지 확실히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했음.
 - 기시다 외무상은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뜻을 함께 밝혔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남중국해 관련국 아세안 국방회의 집결…미·중 격돌 예고(11/2, 연합뉴스)
 - 3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3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이 회의는 2~3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추가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할 가운데 개최되며, 미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万全) 국방부장이 나섬.
 -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기존 입장을 내세우며 최대한 많은 우군을 확보해 연합전선을 구축,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미·러·중·일, 중앙아시아 5개국에 줄줄이 구애(11/2, 연합뉴스)
 - 3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을 향한 주요국의 구애가 잇따르고 있음.
 - 아베 총리가 지난달 이 지역을 첫 방문한데 이어 캐리 국무장관도 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을 처음 방문하는데, 1년 새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모두 이곳에 손길을 내밈.
 - 주요국들이 이처럼 중앙아시아를 끌어안는 것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현안 때문임.

- 중국 핵전력 미·러에 못 미쳐…핵전쟁 시 1시간도 못 버틸 것(11/2, 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달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공개하는 등 핵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러시아의 핵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 중국 인터넷매체인 망이신문(網易新聞)은 2일 러시아 전문지를 인용해 “중국의 전략적 핵무기는 여전히 1950~60년대 옛 소련의 이전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소의 발전이 있었지만 이 역시 소련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 과학자들이 관 기술을 획득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음.
 - 이 매체는 또한, “러시아 전문가들은 만약 중·미 간에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 美 해군, “남중국해 인공섬 분기당 2회 이상 항행할 것”(11/3, 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km) 이내 해역을 분기당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항행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2일(현지시간) 밝힘.
 -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분기별 2회 또는 그 이상 항행할 것”이라며 “그 정도면 지속적으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이라고 할 만한 횟수”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이 같은 정기 항행이 “국제법에 따라 우리의 권리를 정규적으로 행사하고 중국과 다른 국가에게 미국의 관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시진핑 주석, “미국, 중국의 전략적 의도 정확히 인식해야”(11/3,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이 “중미 쌍방은 상호 간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제5차 ‘미중 트랙투 고위급 대화’를 위해 방중한 헨리 키신저(91) 전 국무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사이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출발해(상대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양국관계를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또 양국은 이미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자신은 지난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양자관계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 뒤 중요한 공동 인식을 달성한 바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음.
 - 그가 ‘상호 간의 전략적 의도’, ‘중요한 공동인식 달성’ 등을 거론한 것은 최근 미 군함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근접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남중국해 분쟁에 소형 민간선박으로 ‘해상 인해전술’ 구사(11/3, 연합뉴스)
 - 남중국해상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둘러싸고 촉발된 미국과 중국 간의 해상 분쟁 과정에서 미 해군에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소형 선박들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인해전술’로 지적됐음.
 - 2일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미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의 12해리(약 22.2km) 이내로 진입, 초계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중국의 소형 상선들과 어선들이 수시로 출몰해 라센함의 항해를 방해했음.
 - 익명을 요구한 미 해군 소식통은 중국 해군 함정들이 라센함의 항해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프로답게 행동한 것과 달리 소형 상선이나 어선들은 라센함의 뱃머리를 가로지르고 바짝 붙어 주위를 맴도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음.
 - 美 태평양사령관, “국제법 범위 어디든 작전…남중국해 예외 안 돼”(11/3, 연합뉴스)
 - 중국 환구망 등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베이징대 스탠퍼드센터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 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음.
 - 그는 또 “국제 공해와 공역은 모든 이에게 속한 것으로 어느 한 국가에 지배권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해리스 사령관의 강연내용에 대해 미국이 넓은 국제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의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력시위이며 미국은 이를 항해의 자유로 부르고 있다고 비난했음.
- 美 국방부 장관, “이란·중국·북한·러시아·IS가 5적”(11/4, 연합뉴스)
 - 美 군당국이 글로벌 안보전략 차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적국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이란과 중국, 북한, 러시아, 이슬람 국가(IS)가 수반된 5가지 비상 시나리오인 것으로 나타났음.
 -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주최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음.
 - 워크 장관은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이라크의 부활,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침이 우려스러운 비상 시나리오였다.”며 “당시 우리는 ‘10-30-30’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밝혔음.
 - 그는 “동맹국들의 대응역량이 약화된 반면 적국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됐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4+1’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4+1’은 이란과 중국, 북한이 수반되는 3대 비상 시나리오와 러시아와 나토와의 무력분쟁 이외에 비국가 행위자인 IS가 주도하는 국제테러 행위를 추가한 것임.
- 중국, 미국 등 14개국서 라디오방송국 운영…미 당국 조사 나서(1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14개국에서 33개 라디오 방송국을 중국 관영 라디오방송국 산하에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음.
 -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사의 취재결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핀란드, 네팔 등 4개 대륙 14개국에 있는 33개 이상의 라디오방송국이 중국국제라디오방송(CRI) 산하의 세계적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들 방송국은 주로 CRI나 CRI의 현지 파트너인 중국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미디어업체 3곳이 제공한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어나 중국어, 또는 현지어로 뉴스와 음악, 문화 프로그램 등을 방송함.
 - 특히 뉴스의 경우 중국의 발전상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부각시키는 등 중국 정부 홍보성이 짙은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美中 설전 2라운드…“섬 만들지 마” vs “조상이 물려줬다.”(11/4, 연합뉴스)
 -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중국 창완취안(常万全) 국방부장과의 회동에서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 이 관리는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카터 장관이) 다시 한 번 미국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도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했으며 남중국해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 장 부장은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위협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남해(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섬은 자고이래 중국의 영토로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다. 중국이 섬을 만들어 스스로의 주권을 선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인공섬 건설이 주권 강화 행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美 TPP 통해 中 해킹 정조준(11/5, 연합뉴스)
 -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의 해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TPP가 발효되면 참가국들은 중국의 사이버 절도를 단속하고, 디지털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해킹공격과 무역기밀 절도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함.
 - 중국은 TPP 참가국이 아니지만, 미국은 TPP를 세계 경제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 TPP 합의안에는 데이터의 유통, 사생활보호, 사이버보안 등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으며, 이는 TPP를 활용해 세계표준을 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

- 카터 美국방, 핵항모로 남중국해 순시…중국 ‘안보위협’ 반발(11/5,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5일 남중국해 순시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항공모함에 탑승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 AP통신 등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타고 30분 거리의 남중국해에 있는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 도착했음.
 - 카터 장관의 이번 남중국해 순시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기 위한 시위의 하나임.
 -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비판했음.
- **중외교부장, “미국 상호신뢰 훼손”…케리 장관에 항의(11/6, 연합뉴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군함이 최근 중국의 남해(남중국해)에서 벌인 행동은 양국의 상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엄중 항의’했음.
 - 또 미국은 조속히 대화-협상을 통한 적절한 갈등 관리라는 ‘정확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음.
 - 양측은 또 이란 핵,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케리 장관이 왕 부장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 국제질서 준수국에서 주도국으로 전환(11/6,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에 중국이 부국과 강군 건설의 기치에 맞춰 국제 질서의 수동적인 준수국에서 적극적인 주도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변화가 엿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음.
 - 향후 5년간의 국가 발전 구상이 담긴 건의안에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적인 발언권을 높여 광범위한 이익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음.
 -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이를 두고 ‘대의 개방 수준 확대판’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이래 추구해온 ‘도광양晦(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함)’ 정책의 폐기 의미라는 분석도 나왔음.

- 66년만에 손잡은 中·대만 정상…‘하나의 중국’확인·핫라인 설치(11/7,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7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66년만의 양안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음.
 - 두 정상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한 핏줄’이라는 말을 써가며 친밀감을 나타냈으며,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골자로 한 ‘92공식(九二共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
 - 마 총통이 먼저 양안의 평화발전을 위해서는 ‘92공식’을 굳건히 견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 적대상태의 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 ▲ 양안교류의 확대 ▲ 양안 핫라인 설치 ▲ 공동 중화문화 진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 주석은 마 총통이 제기한 대만의 외교적 고립 문제에도 이해를 표시한 뒤 대만동포가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고 적당한 방식으로 AIB에 가입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마 총통이 제안한 양안 핫라인 설치를 즉석에서 동의했으며, 양측은 양안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는 데에도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전해지지 않고 있음.

- 카터 美국방, “중국은 시험대 올랐다.”…남중국해 작전 지속키로(11/8,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8일(현지시간)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진정으로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음.
 - 최근 핵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타고 직접 남중국해를 순시한 카터 장관은 “우리는 이전에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약 22.2km) 이내에서 계속 작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음.
 - 카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 국립대 강연에서 “남중국해 도서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영유권 주장을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며, 이날 카터 장관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음.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사. 미·러 관계

- 러시아 공습으로 시리아 난민 12만명 발생(11/5,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으로 오히려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견제에 나서는 동시에 러시아의 공습 목표가 되고 있는 시리아 반군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반군의 승전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음.
 -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앤 패터슨 미국 국무부 근동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및 이에 힘입은 정부군의 공세로 최소 12만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음.
 - 또 러시아군이 '테러리스트를 공격한다.'면서 실제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선 반군에 공습의 85~90%를 집중해 수많은 민간인 사망자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음.

아. 중·일 관계

- “아베 총리, 내달 중순 인도 방문 추진”...中견제 박차(1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달 중순 인도를 방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7일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인도와의 3국 안보공조 강화 구상을 확인함으로써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생각이라고 NHK는 전했다.
 - 또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때까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면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에 합의할 생각이며, 더불어 일본과 인도가 이해를 같이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네덜란드 대학 ‘유럽 내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실태조사(11/3, 연합뉴스)
 - 네덜란드의 한 대학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월 3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라이덴아시아센터의 렘코 브뢰커 박사 말을 인용해 “(브뢰커 박사가) 라이덴아시아센터로부터 3만 유로가량을 지원받아 지난달부터 6개월에 걸쳐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실태 조사·연구 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 사업은 북한 노동자들을 통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학술 연구와 함께 정책 제안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브뢰커 박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이미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북한과 달리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유럽연합 국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내 기관과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평양순안공항에 장애인 화장실(11/3,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익명을 요구한 서방 관광객은 2014년 여름 새로 개장한 평양의 순안국제공항 신청사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 이 관광객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화려한 돌로 장식된 청사에 장애인을 나타내는 표시와 ‘위생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문 위에 보임.
 - 이 관광객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장애인 화장실이 몇 군데나 더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비록 한 명씩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시설이지만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가 평가했다.

- 북한이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고 몇몇 인권관련 법규를 제정한 것과 맞물린 인권법 정비의 연장이라는 해석임.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지난 7월 순안국제공항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밝힌 것처럼 국제비행장 역사가 ‘새 세기의 요구’에 합당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견해임.
 -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높은 카타리나 젤위거 전 스위스 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은 올해 초 미국의 한 강연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했음.
 - 북한은 2013년 3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이라는 장애 어린이 치료와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개설했고, 그 해 7월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음.
 - 북한은 또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4차 장애인 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선수단을 파견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북한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첫 외국 공연을 선보였음.
 -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2012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더불어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연해주 북한 노동자, 연간 200~3000 달러 벌어’(11/5, 미국의소리)
- 한국 통일연구원은 11월 4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어리아 일본 와세다대 교수와 이창호 한국 한양대 교수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연해주 이민국에 등록된 북한 노동자 수는 7천3백여 명이고 대부분 건설 일을 하고 있음.
 - 이들은 연간 미화 200달러에서 최대 3천 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러시아 측에서 통상 북한 노동자 1 명에게 월 800달러를 지불하는 것에 비춰볼 때 매우 적은 액수임.
 - 보고서는 현지 북한 관리회사가 러시아에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북한 당국에 내는 ‘계획분’을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준다고 설명했다.
 - 북한 노동자들은 또 북한을 출발할 때 교통비와 비자 수수료, 기숙사 식비 등의 명목으로 1천 달러가량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 노동자들은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상납금’ 이외의 급여는 모두 자신 몫이기 때문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개인적으로 청부 일을 맡기도 함.
 - 보고서는 본국 송환의 위협을 받거나 술과 도박에 빠지고 북한의 이념에 환멸을 느낀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이 무작정 사업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한 지 3개월에서 6개월만 되면 일감을 찾는 요령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외부세계, 자본주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 현재까지는 러시아 관리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눈감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사업이 늘면서 결국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큰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북, 독일산 첨단장비로 핸드폰 전파 감지(11/5, 자유아시아방송)
- 국경연선 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북한 주민들이 올해 8월부터 일절 전화연락을 끊고 있음.
 - 그 원인은 군사용으로 제작된 독일산 첨단 전파감지 장비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으고 있음.
 - 최근 중국에 나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국가보위부가 올해 3월 경 국경연선에 러시아산 휴대전화 추적 장비를 배치한데 이어 7월부터는 독일산 첨단 휴대전화 감지 장비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배낭 크기의 독일산 휴대용 전파감지 장비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감지 장비와는 달리 곁에 표시된 제작번호와 표기들을 흔적 없이 지워버렸다고 하지만 이 장비가 독일산임은 군부대 병기 수리과 군인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그는 말했다.
 - 이 휴대전화 감지 장비는 추적용과 방해전파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경연선에 약 3천대정도, 민경(휴전선)부대들에 6천대정도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 합치면 1만여대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 올해 8월 20일 북한은 중국 전화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를 통해 남한과 통화한 혐의로 양강도 혜산시에서 가정주부여성 3명을 비공개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독일산 전파감지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소식통은 이야기했음.
 - 주민들은 러시아가 독일로부터 수입한 군수용 전파감지 장비를 북한이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도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전파감지 장비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큰 자금이 들었는지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음.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美·日에 '눈에는 눈' 전략(11/8, 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최근 유엔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눈에는 눈'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미국의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양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여 가는 모양새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같은 인권문제로 맞불을 놓는 셈임.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6일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 미국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글에서 "1%의 특권 계층이 99%의 근로 인민 대중을 착취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라며 "미국이야말로 인민 대중에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해줄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주장했음.
 - 이어 "유색 인종과 소수 민족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인종주의국가"라며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썩어빠진 사회제도 그 자체를 들어내지 않는 이상 극심한 인권 위기상황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음.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1월 5일 '미국은 인권에 대해 떠들 자격이 없다'란 글에서 미국의 실업과 노숙, 범죄 실태를 거론하며 "인권을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갖추지 못한 미국이 제 주제에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목청을 돋우고 있어 만 사람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썼음.
 -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라며 비난 세례를 퍼붓고 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월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이 일제 강점 기간 20만여 명의 여성을 성노예화 했으며 "일본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여성의 존엄과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 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판했음.

- 대변인은 일본이 이 외에도 조선인 840만여 명 강제 연행, 100여만 명 학살, 창씨개명, 생체 실험과 같은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70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핏대를 세웠음.
-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2. 북한인권

-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북에 심리적 압박”(11/3, 미국의소리)
 -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관한 언론간담회가 ‘2015 세계민주주의운동 제8차 대회’에 즈음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음.
 -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며 서울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조사 활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서울에 유엔사무소가 있고 그 곳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임.
 - 때문에 COI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획기적인 선을 그은 것은 분명하다고 이 대사는 평가했음.
 - 이 대사는 실제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던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적극 부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스티븐 랩’ 전 미 국무부 전쟁범죄 문제 담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 랩 전 특사는 앞으로 북한 내 잔혹 행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북한을 변화시킬 여러 인권 관련 정보가 수집될 것이라고 말했음.
 - ‘라판디 자민’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는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COI 보고서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 간 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유도한다면 경제적 정책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역대 최대 규모 북한인권 국제회의 11일 서울 개최(11/4, 미국의소리)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인 ‘서울인권대화’ 창립대회가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림
- 한국의 ‘연세 휴먼리버티센터’와 영국의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마그나카르타 800년 북한의 자유와 인권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됨.
- 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마그나카르타 즉, 대한장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3대에 걸친 독재로 기본권마저 박탈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임.
- 이 행사를 주도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상정된 시점에서 열리게 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참상과 해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음.
- 이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책임 추궁에 모아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선 이 문제가 다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음.
-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인권 문제 관련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참여함.
- 이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과 마러네스 버스컴 영국 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리 홍콩 민주당 전 주석 등도 참석해 기조연설과 토론자로 나섬.
- 이번 회의는 마그나카르타의 재고와 합의,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세계의 시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 동영상과 피해자 증언, 세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등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임.
- 이 대사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인권대화’를 싱가포르에서 해마다 국방과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처럼 반관반민 형태의 정례 국제회의로 키울 구상이라고 밝혔음.

-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 회원국들에 공식 소개(11/6, 미국의소리)
 -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11월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음.
 -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결의안을 소개한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루카스 대사는 특히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울러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음.
 -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임.
 - 루카스 대사는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음.
 - 루카스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바란다며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음.
 -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5일 현재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음.
 - 결의안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며,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CNK, “독일서 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11/7, 노컷뉴스)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독일에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ICNK는 베를린에서는 20일부터 6일 동안 북한인권영화제를 통해 ‘크로싱’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북한인권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소개할 예정임.
 - 영화상영과 함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연구위원과 안명철 NK Watch 대표의 증언과 강연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음.
 - 이번 행사는 베를린을 기점으로 드레스덴과 튀빙엔, 마인즈 등 네 도시에서 북한인권 강연과 인권영화제를 진행함.

- ICNK는 현지 파트너로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ICNK 회원단체인 ‘사람’과 공동으로 본 행사를 진행하며, 영화를 통해 국제 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네마포피스재단(Cinema for Peace Foundation)도 공동주최 단체로 초청됐음.
-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영화제와 강연회를 가짐으로써, 독일의 일반인들에게까지 북한 반인도범죄의 국제적 심각성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탈북자

- 유럽탈북자단체, 벨기에서 북한인권 실태 폭로 영상·사진전(11/2, 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유럽총연)는 11월 1일(현지시간) 벨기에 나무르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영상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음.
 - 전날부터 이틀간 나무르 엑스포 전시장에서 아시아 문화 축제가 열린 것을 계기로 탈북민 7명과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벨기에 청년 6명은 관람객들에게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책자와 성명서를 배포했음.
 - 유럽총연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고문·폭행 등 인권침해 실상,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상황, 그리고 최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설명하는 영상 및 사진 100여 점을 전시했음.
 - 유럽총연은 성명서에서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의 발의로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식 상정됐다고 밝히고 이 결의안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음.
 - 이 성명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알리면서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인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무부, 10월 탈북 난민 입국 없어(11/3, 자유아시아방송)
 - 국무부는 올해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이 한 명도 없다고 11월 3일 밝혔음.
 - 이로써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후 2006년 이래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의 수는 186명이 그대로 유지됐음.

- 매년 20명 정도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고 있지만 지난 2015 회계연도에는 15명만이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했고 2014 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8명에 불과했음.
- 미국 정착 탈북 난민의 감소 추세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측은 미국 정부가 북한 난민을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난민이 주로 한국을 재정착지로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지난 10년 미국에는 186명의 탈북 난민이 정착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에는 거의 3만 명 가까운 탈북자가 정착했다는 설명임.
- 또 킹 특사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재정착 관련 훈련과 재정지원, 국적 부여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북한 난민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그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규모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킹 특사는 지적했음.
- 미국 정부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에게 특별대우는 못해주지만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WFP, 북 재해지역 식량지원 집중(11/4,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3분기 동안 지원 대상 9개도 중 식량사정이 가장 나쁘다고 평가된 함경북도와 량강도를 우선 지원했음.
 - 세계식량계획이 11월 4일 공개한 ‘2015년 3분기 대북지원활동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에 78만 1천여 명의 북한 주민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는데 량강도 10개 군과 함경북도 19개 군이 우선 지원 지역이었음.
 - 유엔이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조사해서 작성한 ‘2012년 전국영양조사’에서 서북지역의 두 개도가 식량 상황이 제일 나쁘고 영양실조 비율 또한 가장 높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함.
 - 유엔 긴급중앙구호기금의 추가 지원금 300만 달러로 가뭄 피해가 컸던 13개 군에 사는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10만 명에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8월에는 홍수 피해가 컸던 라선 지역 1만1천 수재민에 5.5톤의 영양강화비스킷을 지원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2천3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79만 명에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 NGO, 신농법 성과 확인차 방북(11/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은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기술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했다고 11월 5일에 밝혔음.
 - 이 단체의 북한 지원을 전담하는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 사무소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지역국장은 북한으로 파견한 전문가가 다음 주 초까지 평안남도의 협력 농장에서 추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야스퍼 국장은 이 단체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지원했다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수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 당국도 새로운 모내기 법과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종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북한 전역으로 신농법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작물의 수량과 모종을 내다 심는 시기를 맞추는 일명 ‘지속가능 뿌리 강화’(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농법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육모상자를 사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면서 평안남도 4개 협동 농장의 쌀 수확량이 이전보다 20%가량 늘었다고 미국친우봉사단은 설명했다.
 - 북한과 기후 환경이 비슷한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도입했는데, 1헥타르 당 1톤의 쌀을 더 많이 생산했다는 설명임.
 - 북한 농민대표를 중국에 보내는 농업 연수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의 겨울철 농사법을 전수할 것이라고 함.
- 미 NGO, 북 학교수리 지원 재검토(11/6,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비영리구호단체 마이크로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중단한 대북 지원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직 유엔 직원인 미국인 크리스토퍼 카펜터 씨는 은퇴 후 소규모 지원사업이란 의미의 봉사단체를 만들어 북한을 포함한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거나 시설을 수리하는 지원활동을 해왔음.
 - 지난해 상반기 이후 지원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북한의 학교 건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겠다고 11월 6일 밝혔다.
 - 마이크로프로젝트의 인터넷에 소개된 대북지원 활동을 보면, 지금까지 북한에서 10개 학교의 시설을 지원했는데, 2007년 큰물 피해로 완전히 무너진 황해남도 재령군 남지리의 소학교는 2층 새 건물의 10개 교실에서 290명의 소학교, 중학교 학생이 공부하도록 했음.
 - 강원도 문천시의 룡정소학교는 거둬들인 태풍에 무너져서 인근의 초급중학교 건물을 5개 교실과 3개 실습실을 갖춘 2층으로 증축해 함께 사용하도록 했음.
 -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촌고급중학교는 2007년 큰물피해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8개 교실, 6개 실습실의 2층 건물로 증축됐음.

- 마이크로프로젝트는 이밖에 강원도 법동군의 수침골, 황해남도 안악군, 봉춘군, 백춘군에도 학교 공사를 지원했음.
- 지원한 10개 학교 중 7곳은 공사를 끝냈지만, 황해남도의 소학교와 강원도, 평안남도의 초급중학교에 대한 시설 보수 공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대북지원이 재개되면 이들 학교의 중단된 공사부터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8. 북한동향

-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과 ‘북 인권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북남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며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저해를 주는 적대행위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11.2, 중앙방송/ 긴장격화의 장본인)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